



목 차

<예비타당성조사>

■ 국토교통부	1
1. 용인-과천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	2
2. 남해선 창원-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	4
3. 봉오-경명 혼잡도로 건설사업	5
■ 농림축산식품부	7
4.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	8

<사업계획 적정성 검토>

■ 기획재정부	11
5. 주멕시코(대) 통합청사 신축	12
6. 부천통합청사 신축	14
■ 산업통상자원부	16
7. 시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사업	17
8. 시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	19
9. 유통기업 해외진출지원	21
■ 산업통상자원부/보건복지부/농림축산식품부/환경부	23
10.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	24

<예비타당성조사>

국토교통부

1. 용인-과천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

[주무부처 사업계획서]

1 사업계획(안)

① 사업명 (유형)		영동(용인-과천)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		
② 총사업비 (국고)		27,576억원 (국고 : 11,376 도공 : 16,200)	③ 사업기간	26년 ~ 35년 (공사 7년)
④ 추진 주체	주관부처			
	도공			
⑤ 사업목적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하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입체적 확장으로 영동선 도로용량 증대 및 상습정체 해소 ○ 수도권 남북방향 교통량을 과천방향(수원-과천)으로 분산하여 수도권 남부의 교통정체 근본적 개선 		
⑥ 성과지표		○ 해당없음		
⑦ 추진경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진근거 -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('21~'30) -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('21~'25) 		
⑧ 사업규모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내용 : 영동선 지하고속도로 신설 수원-과천 간 고속도로 신설 ○ 사업규모 : 지하고속도로 및 고속도로 건설(4차로) ○ 사업연장 : 30.0km (지하도로 : 21.1km) 		
⑨ 사업추진체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수행주체 : 국가(국토교통부, 한국도로공사) ○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: 예비타당성조사→타당성평가(12개월)→기본 및 실시설계(20개월)→공사시행(7년) 		
⑩ 자원조달방식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형태 : 보조 (국비에 따른 도공 매칭) ○ 자원분담 : 국고 11,376억원, 도공 16,200억원 ○ 국고지원 비율(회계구분) : 공사비 40%, 용지비 100% ○ 시설운영비 총당방식 : 한국도로공사 운영(통행료) 		

⑪ 사업운영체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운영주체 : 한국도로공사 ○ 운영계획 : 전국 고속도로망을 하나로 묶어 통합채산제 운영
⑫ 사전용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행
⑬ 사업기대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도권 남부 간선도로망의 중심축인 영동고속도로는 일교통량이 최대18만대로 용량을 초과하여 상습정체 발생 중 ○ 수원~과천간 남북 3축 지선 신설로 수도권 남부지역(용인, 수원)에서 과천, 서울방면 연결성 강화 ○ 수원, 의왕 등 경기 남부에서 서울까지 연결하는 신규 간선도로망(남북 3축의 지선) 구축

2. 남해선 창원-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

[주무부처 사업계획서]

1 사업계획(안)

① 사업명 (유형)	남해선 창원-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		
② 총사업비 (국고)	1,218억원 (국고 : 596억원 도공 : 622억원)	③ 사업기간	26년 ~ 34년 (공사 5년)
④ 추진 주체	주관부처		
	도 공		
⑤ 사업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간선도로망(10×10×6R²) 동서1축으로 적정 도로용량 확보를 통해 간선기능을 강화하고,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비 ○ 연계구간인 칠원-창원 확장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, 병목구간 해소를 통해 국민 교통 편의성 및 안전성 향상 추진 		
⑥ 성과지표	○ 해당없음		
⑦ 추진경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진근거 -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('21~'30) -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('21~'25) 		
⑧ 사업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내용 : 남해선 창원-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 ○ 사업규모 : 고속도로 확장(8→10차로 확장) ○ 사업연장 : 4.8km 		
⑨ 사업추진체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수행주체 : 국가 (국토교통부, 한국도로공사) ○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예비타당성조사 → 타당성평가(12개월) → 기본설계(14개월) → 실시설계(18개월) → 공사(확장 5년) 		
⑩ 자원조달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형태 : 보조 (국비에 따른 도공 매칭) ○ 자원분담 : 국고 596억원, 도공 622억원 ○ 국고지원 비율(회계구분) : 공사비 40%, 용지비 100% ○ 시설운영비 총당방식 : 한국도로공사 운영(통행료) 		
⑪ 사업운영체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운영주체 : 한국도로공사 ○ 운영계획 : 전국 고속도로망을 하나로 묶어 통합채산제 운영 		
⑫ 사전용역	○ 수행		
⑬ 사업기대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확장사업을 통해 교통혼잡 개선 및 간선기능 향상 기대 ○ 부산항 신항,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등과 연계하여 원활한 여객 및 화물 운송지원, 산업·물류 경쟁력 향상 		

3. 봉오-경명 혼잡도로 건설사업

[주무부처 사업계획서]

1 사업계획(안)

① 사업명 (유형)		도로(대도시권혼잡도로)	
② 총사업비 (국고)		2,135.36억원 (국고:1,011.64억, 지방비:1,023.72억)	③ 사업기간 2026년~2032년 (1단계 7년)
④ 추진 주체	주관부처		
	지자체·기관		
⑤ 사업목적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규모 개발계획 진행에 따른 교통유발량 처리 대책 수립 ○ 인천광역시 북부 남북축 간선도로 교통혼잡 개선 ○ Missing Link 연결 	
⑥ 성과지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성과지표명: IV. 교통 시스템 혁신을 통해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든다 - ㉟ 자동차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(명) 	
⑦ 추진경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진근거 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1·2차 인천시 도로건설·관리계획(인천시, '16~'20, '21~'25) -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(대광위, '21~'25) -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(인천시, '20~'40) 	
⑧ 사업규모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물량 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차로수: 4차로(왕복) - 연장 : 2.9km 	
⑨ 사업추진체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수행주체 : 지자체(인천광역시) * 도로법 제85조에 따라 도로에 대한 비용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자체가 부담하되, 동 법 제86조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함. 	
⑩ 자원조달방식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형태 : 보조 ○ 자원분담 : 국고 + 지방비 (도로법 제86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6호에 근거하여 국고 보조) ○ 국고지원 비율(회계구분) : 설계비의 50% + 공사비의 50% ○ 시설운영비 총당방식 : 지방비 	
⑪ 사업운영체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운영주체 : 국고50% 보조하여 도로를 건설,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 	

	여 운영
⑩ 사전용역	○ 수행
⑬ 사업기대효과	○ 남북축 교통량 분담에 따른 혼잡 해소로 통행시간절감 ○ 검단지구 입주율 제고 및 장래 계양지구, 대장지구 등 신규개발계획으로 가중될 교통유발량 처리를 위한 광역교통망 공급 대책 마련으로 수도권 주택난 해결에 정책적 기여

<예비타당성조사>

농림축산식품부

4.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

[주무부처 사업계획서]

1 사업계획(안)

① 사업명 (유형)		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(건축사업)	
② 총사업비 (국고)		3,452억원 (국고: 1,035.6 지방비: 2,416.4)	③ 사업기간 '25년 ~ '32년
④ 추진 주체	주관부처		
	지자체 · 기관		
⑤ 사업목적		<input type="checkbox"/> 선진 유통 시스템 구축 및 기능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거래 품목의 품질관리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콜드체인 시스템 등 물류 인프라 확충 ○ 디지털 기반의 고효율 유통 및 마케팅 시스템 도입 ○ 풀필먼트 기능을 신설하여 온라인 도매시장 대응력 제고 ○ 원스톱 소포장 및 배송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 중심 유통체계 강화 <input type="checkbox"/> 다양한 유통환경에 부합하는 도매시장 기능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커머스 시장 대응을 위한 소포장, 선별, 맞춤형 상품화 체계 마련 ○ 푸드플랜과 연계한 지역 유통 및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<input type="checkbox"/> 혁신적 시설 배치를 통한 물류동선 최적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매장-중도매인점포 및 물류차량-보행자 간 동선 분리 ○ 반입-경매-피킹-점포-배송-풀필먼트 등 물류 고도화·체계화 <input type="checkbox"/> 유통시설 통합 및 안전성 확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무분별한 시설 확장 등 동선 혼잡으로 안전사고 위험 구조적 해소 ○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로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대응 능력 강화 ○ 반복적인 시설 보수비의 절감을 통한 유지관리 효율 제고 	
⑥ 성과지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○ 측정방법: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및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내부자료 활용 	
⑦ 추진경위		<p><법적근거></p> <input type="checkbox"/>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0조(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) 제1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 1.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·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	

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(기금의 용도) 제2항 제4호</p> <p>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.</p> <p>4.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3조(재정 지원)</p> <p>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기구의 육성을 위하여 도매시장·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<정부정책>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(농식품부, '23.1월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 대응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<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> 발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①산지 유통 거점화·규모화, ②농산물 거래 디지털 전환, ③창의와 경쟁의 유통생태계 조성 등을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연계 농산물 유통·물류 혁신 추진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(관계부처 합동, '24.5월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①공영도매시장 공공성·효율성 제고, ②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, ③산지 유통 규모화·효율화, ④소비자 유통 환경 개선 등을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 추진
<p>⑧ 사업규모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(사업부지)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33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(사업물량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사업규모) 부지 112,282㎡, 건축연면적 74,967.9㎡(순환재건축) ○ (주요시설) 청과거래동, 상품화동, 수산동, 활성화동, 공동배송장
<p>⑨ 사업추진체계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수행주체 : 지자체(대전광역시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: 예비타당성조사('25~'26) →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('26~'27) → 설계/공사('27~'32) → 준공('32)</p>
<p>⑩ 자원조달방식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지원형태 : 보조 지원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자원분담 : 국고, 지방비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국고지원 비율(회계구분) : 국고 30%, 지방비 70%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시설운영비 총당방식 : 자체수입 100%</p>
<p>⑪ 사업운영체계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운영주체 : 지자체(대전광역시)</p>
<p>⑫ 사전용역</p>	<p>○ 수행</p>

⑬ 사업 기대효과

- 소비형태 변화에 부합하는 도매시장 조성
- 도매시장 기능 재정립을 통한 경쟁력 강화
-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유통환경 현대화
- 대규모 유통채널 및 지역 네트워크 연계 강화
- 유통비용 절감 효과

〈사업계획 적정성 검토〉

기획재정부

5. 주멕시코(대) 통합청사 신축

[주무부처 사업계획서]

1 사업계획(안)

① 사업명 (유형)	※ 사업유형 : 건축(공공청사)		
② 총사업비 (국고)	548억원 (국고: 548억원 지방비: - 민자: -)	③ 사업기간	26년~31년
④ 추진 주체	주관부처		
	지자체·기관		
⑤ 사업목적	○ 해외 주요 거점의 복합개발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 제고, 국격에 맞는 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추진		
⑥ 성과지표	○ 해당사항 없음		
⑦ 추진경위	○ 추진근거 : - 「국유재산법」 제57조(개발)에 따라 기금개발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안에서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며, 캠프가 총괄청을 대리하여 기금을 재원으로 청사 등 국가 필요시설을 개발하는 통합청·관사 개발사업을 수행 - 「한국자산관리공사법」 제26조(업무)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입 받은 재산의 개발		
⑧ 사업규모	○ 사업물량 : 총연면적 9,299㎡		
⑨ 사업추진체계	○ 사업수행주체 : 국가(기획재정부), 수탁기관(한국자산관리공사)		
⑩ 자원조달방식	○ 지원형태 : 국유재산관리기금 전액 지원 ○ 자원분담 : 전액 국고 ○ 시설운영비 총당 : 통합청사 입주기관의 관리비(각 부처 일반회계 예산)로 총당		
⑪ 사업운영체계	○ 사업성격 :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재원으로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기금개발사업 ○ 법·규정 적용 :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특정하는 법·규정을 제외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, 계약체결, 인허가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주체를 '국가'로 해석하여 적용 ○ 수행체계 : 기획재정부 주관, 개발 사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 -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수요기관 간 개발기간 중 협의체계를 구성,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요 의사결정 협의		

⑫ 사전 용역	○ 수행
⑬ 사업기대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지부진했던 재외공관 국유화사업의 시범사업으로 해외 국유재산 복합개발의 실현가능 모델 확인 등 마중물 역할 수행 ○ 상징성 있는 복합청사 신축으로 국격 제고, 재외국민 통합서비스 제공 및 통합행정의 시너지 창출, 현지 한국 문화 전파 등 기대

6. 부천통합청사 신축

[주무부처 사업계획서]

1 사업계획(안)

① 사업명 (유형)		※ 사업유형 : 건축(공공청사)	
② 총사업비 (국고)		779.6억원 (국고: 779.6억원 지방비: - 민자: -)	③ 사업기간 26년~31년
④ 추진 주체	주관부처		
	지자체· 기관		
⑤ 사업목적		○ 민간 임차 중인 고용노동부와 노후화된 선관위 청사를 통합 개발, 산하기관 입주를 통한 국유지 가치제고 및 재정지출 효율화	
⑥ 성과지표		○ 해당사항 없음	
⑦ 추진경위		○ 추진근거 : - 「국유재산법」 제57조(개발)에 따라 기금개발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안에서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며, 캠프코가 총괄청을 대리하여 기금을 재원으로 청사 등 국가 필요시설을 개발하는 통합청·관사 개발사업을 수행 - 「한국자산관리공사법」 제26조(업무)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입 받은 재산의 개발	
⑧ 사업규모		○ 사업물량 : 총연면적 22,439㎡	
⑨ 사업추진체계		○ 사업수행주체 : 국가(기획재정부), 수탁기관(한국자산관리공사)	
⑩ 자원조달방식		○ 지원형태 : 국유재산관리기금 전액 지원 ○ 자원분담 : 전액 국고 ○ 시설운영비 총당 : 통합청사 입주기관의 관리비(각 부처 일반회계 예산)로 총당	
⑪ 사업운영체계		○ 사업성격 :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재원으로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기금개발사업 ○ 법·규정 적용 :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특정하는 법·규정을 제외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, 계약체결, 인허가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주체를 '국가'로 해석하여 적용 ○ 수행체계 : 기획재정부 주관, 개발 사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 -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수요기관 간 개발기간 중 협의체계를 구성,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요 의사결정 협의	

⑫ 사전용역	○ 미수행
⑬ 사업기대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저활용 국유지의 최유효 활용 도모 ○ 분산된 고용행정 기능을 통합하여 협업체계 강화 및 행정서비스 집적화 제고 ○ 기금청사 일반화 전환을 통한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및 국회 지적사항 해소

<사업계획 적정성 검토>

산업통상자원부

7.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사업

[주무부처 사업계획서]

1 사업계획(안)

① 사업명 (유형)		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사업 ※ 사업유형 : 산업·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	
② 중기재정지출		5,018억원('26~30년)	③ 사업기간 '26~30년 (5년)
④ 추진 주체	주관부처		
	지자체· 기관		
⑤ 사업목적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“AI 기반 전력운영 시스템+ESS+재생e” 구축을 통해 전력계통 안정성 제고 및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* 마련 * 배전망 ESS가 설치되는 용량만큼 추가 재생e 접속 가능 	
⑥ 성과지표		○ 성과지표명: 분산자원 확보량	
⑦ 추진경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진근거 - '24.6.14 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」 시행 제47조 분산에너지 개발·보급 촉진 위해 보조 또는 융자 가능 - '25.7.31 「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계획」 발표 	
⑧ 사업규모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대상 : 호남지역* 배전망에 ESS를 구축·운영하는 VPP사업자, 주민협의체(지역주민, 사업자 등) * 국내 최대 재생e 자원 보유하고 있으나, 출력제어 등 계통 한계가 빈번한 지역 ○ 사업내용 : 배전망 ESS 활용 사업 추진시 설치 비용 지원 ○ 사업예산 : 총사업비 약 1조 29억원, 국비지원 약 5,018억원 ○ 사업기간 : '26~30년 	
⑨ 사업추진주체 및 전달체계		○ 사업 수행주체 : 한국에너지공단	

⑩ 자원조달방식	○ 지원형태 : 보조
⑪ 사전용역	○ 미수행

<p>⑫ 사업기대효과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별 전력 편차 및 계통 불안정성 완화 ○ 탄소중립 이행 등을 위한 재생e 확대 기여 ○ VPP 등 신산업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스타트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○ 대규모 ESS 설치에 따른 운영·관리 등 일자리 창출 및 주민참여형 수익모델을 통해 지역 내 수익성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
-----------------	--

8. 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

[주무부처 사업계획서]

1 사업계획(안)

① 사업명 (유형)		AI 기반 분산에너지특화지역지원 (세부)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의 신규 내역사업 ※ 사업유형 : 산업·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					
② 중기재정지출		700억원('26~'30년)	③ 사업기간	'26년~'30년			
④ 추진 주체	주관부처						
	지자체· 기관						
⑤ 사업목적		○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전력직접거래 특례를 적용한 신산업을 발굴·지원하여 ①전력 자급율 편차 완화, ②재생에너지 확대, ③전력 신산업 육성 유도					
⑥ 성과지표		○ 성과지표명: 사업 시행 전후 특화지역 분산화율의 차 ○ 측정 산식: 사업시행 후 특화지역 분산화율* - 사업시행 전 특화지역 분산화율* * 분산화율 계산 : 분산에너지 생산·공급량 ÷ 전력소비량					
⑦ 추진경위		○ 추진근거 : - 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」 제47조(보조·융자)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(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) - 「국가재정법」 제38조(예비타당성조사) 제2항 제8호 및 제10호					
⑧ 사업규모		○ 사업내용 :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차세대 전력망 실증사업(① VPP, ②V2G, ③ESS Farm 등) 국비 지원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① 분산전원(재생e, ESS 등)을 AI를 활용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하여 운영·관리 최적화 ② 전기차를 ESS처럼 충·방전하여 전력시장에 참여 ③ ESS를 활용하여 전기 충전 및 인근 데이터센터·항만에 전력 공급</div> ○ 지원대상 :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사업자 등 ○ 지원요건 :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중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○ 지원율 : 50% 이내 ○ 지원금액 : '26년 100억원					
		구분	'26	'27	'28	'29	'30
		예산	100억원	100억원	150억원	150원	200억원
		지원규모	특화지역 2개소	특화지역 2개소	특화지역 3개소	특화지역 3개소	특화지역 4개소
⑨ 사업추진주체		○ 사업수행주체 : 한국에너지공단					

<p>및 전달체계</p>	<p>○ 사업 진행절차 및 전달체계 : 사업 공고(산업부) → 사업신청 접수·평가 및 사업자 선정(공단) → 보조금 교부(공단) → 사업수행(민간, 지자체 등) → 설치 확인 및 사후관리(공단)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table style="margin: auto;"> <tr> <td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'25.4분기</td> <td style="padding: 0 5px;">⇨</td> <td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'26. 1분기</td> <td style="padding: 0 5px;">⇨</td> <td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'26.2분기</td> <td style="padding: 0 5px;">⇨</td> <td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~'26.4분기</td> <td style="padding: 0 5px;">⇨</td> <td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'26년~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사업시행 준비</td> <td></td> <td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사업공고 및 접수</td> <td></td> <td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사업자 선정 및 협약</td> <td></td> <td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사업 수행</td> <td></td> <td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설치확인 및 사후관리</td> </tr> </table> </div>	'25.4분기	⇨	'26. 1분기	⇨	'26.2분기	⇨	~'26.4분기	⇨	'26년~	사업시행 준비		사업공고 및 접수		사업자 선정 및 협약		사업 수행		설치확인 및 사후관리
'25.4분기	⇨	'26. 1분기	⇨	'26.2분기	⇨	~'26.4분기	⇨	'26년~											
사업시행 준비		사업공고 및 접수		사업자 선정 및 협약		사업 수행		설치확인 및 사후관리											
<p>⑩ 자원조달방식</p>	<p>○ 지원형태 : 보조(민간경상보조) ○ 자원분담 : 국가 50% : 민간 50% ○ 국고지원 비율(회계구분) : 50% 이내(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)</p>																		
<p>⑪ 사전용역</p>	<p>○ 미수행</p>																		
<p>⑫ 사업기대효과</p>	<p>○ 전력의 지역내 생산, 지역내 소비 체계 전환을 통해 편차 완화 ○ 탄소중립 이행 등을 위한 재생e 확대 기여 ○ VPP 생태계 활성화 등 통한 수출산업화 ○ 지역경제 활성화</p>																		

9. 유통기업 해외진출지원

[주무부처 사업계획서]

1 사업계획(안)

① 사업명 (유형)		유통기업 해외진출지원 (무역진흥 분야)	
② 중기재정지출		1,500억원	③ 사업기간 '26년 ~ '28년
④ 추진 주체	주관부처		
	지자체 · 기관		
⑤ 사업목적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네트워크와 브랜드 파워를 갖춘 온·오프라인 유통플랫폼과 제품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지원하여 수출시장 확대, 판로다변화 및 글로벌 유통플랫폼 육성 - 한류 열풍이 불고있는 글로벌사우스 지역 등 해외로 유통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여 강소·중견기업의 해외동반 진출을 통한 직·간접적 수출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 도모 - 보호무역주의 심화 속, 수출시장·품목 다변화 통한 무역구조 혁신으로 한국의 수출 모멘텀 유지 	
⑥ 성과지표		○ 성과지표명: ①유통 컨소시엄 참여기업 매출액, ②해외 현장 마케팅운영 횟수, ③유통 플랫폼 해외성과	
⑦ 추진경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진근거 : ①유통산업발전법 제25조, ②신정부 정책공약, ③대외무역법, ④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①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5조(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) 의거 해외유통시장 진출 위한 공동판매망 구축을 위한 정부 예산 투입 필요 ② 「신정부 공약」 수출시장·수출품목 다변화 지속 추진,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내수 강소·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, 모두의 성장 ③ 「대외무역법」 제4조(무역진흥), 8조(민간 협력활동 지원)에 의거 유통 컨소시엄에 대한 해외 진출 지원사업 운영 ④ 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」 제1조(목적), 제13조(보조금)에 따른 무역진흥 지원 및 이를 위한 보조금 지급 ⑤ 「상공회의소법」 제3조(사업)에 의거 국내 상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통상 진흥 지원 및 이를 위한 보조금 지급 	
⑧ 사업규모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내용: 유통 플랫폼의 해외진출 지원 및 한류 역지구 활성화 지원 - 국내 화장품, 의류 등 온·오프라인 유통플랫폼 기업*의 해외진출 시 플랫폼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해외 동반진출할 수 있도록 플랫폼업계의 컨설팅, 홍보·마케팅, 물류비 등을 지원 	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대상 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글로벌사우스 등으로 진출하는 유통기업(온·오프라인) ②자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역직구 사업을 확대하는 유통기업 ○ 예상규모 : 50,000백만원(3년 총 150,000백만원)
⑨ 사업추진주체 및 전달체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행주체: 대한무역투자공사
⑩ 자원조달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형태 : 민간경상보조 ○ 자원분담 : 국가부담 및 민간부담 ○ 국고지원 비율(회계구분) : 7 : 3
⑪ 사전용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수행
⑫ 사업기대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통-중소기업 동반진출을 통한 K-소비재의 판로다변화·수출시장 확대 ○ 글로벌 K-유통 플랫폼 육성 ○ 글로벌 고객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선순환 구조 확립

〈사업계획 적정성 검토〉

산업통상자원부/보건복지부/농림축산식품부/환경부

10.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

[주무부처 사업계획서]

1 사업계획(안)

① 사업명 (유형)		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(제조) ※ 사업유형 : 산업 분야										
② 중기재정지출		2,625억원(국비 2,100억원)	③ 사업기간 '26년 ~ '27년 (2년)									
④ 추진 주체	주관부처											
	지자체 · 기관											
⑤ 사업목적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AI 융합산업 중 단기내 성과창출이 가능한 유망분야를 선정하여, 이를 집중 지원하는 'AX-Sprint(전력질주)' 프로젝트 추진 - 이를 통해 ①AI 관련 제품·서비스 신시장을 빠르게 창출 <li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기존 제조·서비스 기업들의 AX를 가속화 <li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③새로운 AI 전문기업 육성 <li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④AI 관련 국민 체감도와 인식 제고 										
⑥ 성과지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성과지표명: 사업화 실적, 특허 ○ 측정 방법:사업화 매출 및 해외 수출,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										
⑦ 추진경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진근거 - 「국가재정법」 제38조 제2항 제10호 - 「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」 제20조 -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15조 										
⑧ 사업규모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내용 : 1~2년 내 성과도출이 가능한 제품·서비스 상용화 지원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0%; text-align: center;">지원 유형</td> <td style="width: 20%;">Type1</td> <td>▶ 1년內 즉시 개발가능하며, 시장에 빠르게 침투 가능한 품목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Type2</td> <td>▶ 국민 활용도가 높고, 파급력이 큰 핵심 품목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원 방향</td> <td colspan="2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AI 응용제품의 성능·신뢰성 평가 등 실증 및 양산체계 구축 ▶ 기성 제품의 AI 서비스 탑재(AI 모델 설계·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) ▶ 제품 인증 획득 및 특허·상표 등 지식재산권 확보 </td> </tr> </table>		지원 유형	Type1	▶ 1년內 즉시 개발가능하며, 시장에 빠르게 침투 가능한 품목		Type2	▶ 국민 활용도가 높고, 파급력이 큰 핵심 품목	지원 방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AI 응용제품의 성능·신뢰성 평가 등 실증 및 양산체계 구축 ▶ 기성 제품의 AI 서비스 탑재(AI 모델 설계·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) ▶ 제품 인증 획득 및 특허·상표 등 지식재산권 확보 	
지원 유형	Type1	▶ 1년內 즉시 개발가능하며, 시장에 빠르게 침투 가능한 품목										
	Type2	▶ 국민 활용도가 높고, 파급력이 큰 핵심 품목										
지원 방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AI 응용제품의 성능·신뢰성 평가 등 실증 및 양산체계 구축 ▶ 기성 제품의 AI 서비스 탑재(AI 모델 설계·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) ▶ 제품 인증 획득 및 특허·상표 등 지식재산권 확보 											
⑨ 사업추진주체 및 전달체계		○ 사업수행주체 : 전문기관										

⑩ 자원조달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형태 : 출연 ○ 자원분담 : 국비 및 민간 매칭 ○ 국고지원 비율(회계구분) : 80%
⑪ 사전용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수행
⑫ 사업기대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AI 응용제품 시장 선점 ○ AI 응용제품 국내 생태계 강화 ○ 국민 체감도 및 편의성 제고